

# 4.

##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 구축	120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27
제3절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146
제4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150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55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179

## 제1절

#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 구축

## 1. 서울 G20 정상회의

### 1)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준비체제와 전략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로 지정하고 연례화하였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G20의 성과를 인정하고 G20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피츠버그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G8이 아닌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에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과거와 달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1.28-29) 계기에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향으로 ① 기존 공약의 착실한 이행 ② 개발과 글로벌금융안전망 등 신규 의제의 도입 ③ 적극적인 outreach 활동을 통한 비G20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지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정상회의 의제를 협의·교섭하는 G20 준비위원회를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G20 대사로 임명하여 보다 체계적인 G20 외교를 추진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G20 국가, 주요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정상외교,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양자 및 다자 외교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 2) 토론토 G20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통해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G20은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요 국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G20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 정상회의 직전의 토론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총력 외교를 펴나가기로 하였다.

2010년에 개최된 토론토 및 서울 정상회의가 모두 큰 성과를 거두어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G20 체제가 공고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의제면에서 캐나다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전세계 국가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G20 국가와 APEC 등 지역협력체 등을 대상으로 G20 체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적극 공조하였다.

2010년 2월 22-2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G20 의제 준비과정을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토론토 정상회의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설명하였으며, 우리는 이와 연계해서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등 기존 G20 합의 사항의 이행,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이슈 소개, 비G20 국가들의 관심사항을 투영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서울 정상회의를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캐나다가 2010년 4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아시아 국가 대상 G20 정상회의 설명회에 우리나라도 참석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점과제를 설명하는 한편, 캐나다와 G20 정상회의 초청국 범위 문제, 무역 등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6월 26-27일간 개최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재정건전화, 금융부담금 등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현안을 조율하였고, G20의 정책의지를 토대로 정책상호평가·공조체계(Framework)를 확립하였다.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의한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2013년 말까지 추가로 3년 연장기로 합의하는 등 자유무역기반을 한층 제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Consensus Builder)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이대통령은 재정건전화 추진과 경기회복세 모멘텀 유지간 균형잡힌 메

시지를 유도하고, 에너지 보조금 합리화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신규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토론토 정상회의가 서울 정상회의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주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긍심을 크게 북돋웠지만, 한편으로는 환율문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연기되어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신규의제로 역점 추진했던 개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가 정상차원에서 공식 의제화됨으로써 서울 정상회의 신규의제의 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0년 11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 국가 이외에도, 5개 초청국<sup>1)</sup>, 7개 국제기구<sup>2)</sup>가 참석한 가운데 각국 정부대표단 6,000여명, 언론인 약 4,000여명 및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의 CEO 120명 등이 방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의제 및 행사 운영 모두 큰 성공을 거둔 회의였다. 의제면에서는 기존 G20 정상회의 논의 의제인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마련’, ‘IMF 쿼터개혁과 이사국수 조정 합의’, ‘Basel III 및 SIFI 문제 합의’, ‘DDA 타결 의지 재확인’ 등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당시 국제적 관심사였던 환율 갈등 문제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나아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아서는 안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하자는 G20의 국제협력정신을 G20 정상들이 확고하게 공감한데 따른 조치였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로스 칸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2010.10.22-23, 경주) 이후 “매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한 신흥국 및 개도국으로의 IMF 쿼터(6%) 이전을 합의하고 이사국수를 조정하였으며, 바젤 III 도입 등 지난 수년간 구체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되어온 현안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해결하였다.

1) 스페인, 말라위(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에티오피아(아프리카 개발 파트너십 의장국), 베트남(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싱가포르  
2)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우리나라가 신규의제로 역점 추진했던 개발분야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개도국이 역량강화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탄력대출제도의 개선과 예방대출제도 및 복수국가에 대한 탄력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들 분야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들의 관심사안으로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이들 비G20 국가와 G20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G20의 정당성을 높이는 제도적·지적 기반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들의 관심 사안에 있어서 이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비G20 국가들과 협의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G20 대사가 아시아·아프리카·미주·유럽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륙별 협의를 실시하고, 국제연합·국제노동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 정상회의의 추진 현황을 적시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 외교통상부 실시 G20 outreach 내역

### - 아시아: 6회

APEC 고위관리회의(2.22-23, 히로시마), 아시아 국가 대상 한·캐나다 설명회(4.24, 하노이), ASEAN+3 외교장관회의(7.21,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포럼(8.6, 바누아투), ASEAN+3 통상장관회의(8.26-27, 하노이), APEC 고위관리회의(9.15-19, 일본 센다이)

### - 아프리카: 1회

아프리카 연합 대상 설명회 개최(9.9, 에티오피아)

### - 중남미: 4회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 외교장관회의(1.16-17, 동경), 한·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회의(4.20, 파나마), 리오그룹(8.11-12, 칠레), 카리브 공동체(10.22, 뉴욕)

### - 유럽: 1회

노르딕5국/발트3국 설명회(8.24, 핀란드)

### - 중앙아/CIS: 2회

아스타나포럼(7.1-2, 카자흐스탄), G20 세미나(10.7, 모스크바)

### - 중동: 2회

세계경제포럼 Global Redesign Summit(6.1, 카타르), 아랍리그 대상 설명회(10.5, 카이로)

### - 국제기구: 8회

유엔(3.19, 5.13-14, 7.1-2, 10.22, 11.16), UN ESCAP(10.15-26, 방콕), OECD(5.28), ILO(9.7, 제네바)

## 2.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 대한 참여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자간 자유무역 원칙에 의한 세계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에 매년 참가하여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OECD 뇌물방지작업반, 한국경제검토회의 등 OECD 산하위원회 및 작업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은 우리나라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입한 해로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G20에 대한 OECD의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OECD 주요 회의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녹색성장이 OECD의 주요 과제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 2)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회원국 수가 62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제66차 UNESCAP 총회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과 재정시스템'을 주제로 2010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총회는 1991년 제47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두 번째 총회로, 방글라데시 총리, 키리바시 대통령, 바누아투 총리를 포함하여 10여명의 각료 및 회원국 정부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인천 총회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총회 의장으로 참석하여 동 회의를 주재하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각료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 개막연설을 통하여 총회 주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기여를 소개하였다. 인천선언문이 채택되고, 인천 소재 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APCICT) 상설화가 결정되었으며, 2012년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2003-2012) 이행사항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되고, 동북아지역사무소가 개소되었다. 금번 인천 ESCAP 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경제사회 개발분야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3) 다보스포럼 참석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는 매년 초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글로벌 이슈와 세계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민간 포럼이다. 다보스포럼은 2,5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2010년은 1월 27-31일간 "더 나은 세계 : 신사고, 재설계, 재건설"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Rethink, Redesign, Rebuild)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고, 주최측은 금년도 G20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다보스포럼에 주빈으로 초청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의장국으로서 "단독특별연설(Special Address)" 세션에 참석하여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대통령은 "21세기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션에 참석하여,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 사파테로(Zapatero) 스페인 총리, 주마(Zuma) 남아공 대통령, 칼데론(Calderon) 멕시코 대통령, 중(Dung) 베트남 총리와 효과적인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같이 2010년 세계경제포럼 제40차 연차총회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행보를 가늠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G20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보호무역 대응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험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G20 정상회의(2008.11.15)에서 우리 대통령 주도로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보호무역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태스크포스』가 통상교섭조정관을 의장으로 구성되어 산하에 국제회의대책반, 개별조치대응반 및 WTO제소대책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는 G20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WTO가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WTO는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의 무역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지원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2010년 총 2차례(6월, 11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하였고, OECD, UNCTAD와 공동으로 G20 모니터링 보고서를 2회(6월, 11월) 회람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외교통상부는 대응이 필요한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품목분류, 강제인증, 라벨링 포함)에 대해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상기 14건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 6천만불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미국측이 스테인리스 박판과 후판 및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적용해 온 반덤핑 조치(제로잉) 분쟁에서 2011년 2월 24일 승소하였다.

## 제2절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1. 개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과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의 급증 등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FTA 추진로드맵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주요 국가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FTA 추진 노력의 결과, 2009년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총 4건, 15개국과 FTA를 발효시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2010년 들어와서는 자원민족주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완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페루, 호주 등과의 FTA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는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매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12월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3년 반 동안 지연되어 온 한·미 FTA 비준의 진척을 위한 결정적 모멘텀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10월 한·EU FTA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10년 1월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와의 FTA를 발효시키고 2010년 8월 한·페루 FTA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중국과의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FTA 추진 여

건 조성을 위해 정부간 회의를 개시하였으며, 일본과는 FTA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국장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출범시켰다.

또한 호주,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상당부분 진척시켜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터키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착실히 진전시켰으며, 베트남·중미 등과도 공동연구 출범 등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거대 선진 및 신흥 경제권과의 FTA 추진

### 1) 한·미 FTA 비준 노력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30일 서명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국내 비준 및 발효가 계속 지연되었다. 당초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준·발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7년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2008년 10월 8일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동 동의안은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07년 9월 「한·미 FTA의 미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지속과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 절차는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6.26, 11.11)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 정상 의지를 토대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양국 통상장관은 2010년 10월 26일(샌프란시스코)과 11월 8-10일(서울) 2차례에 걸쳐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시간 부족으로 인해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 이후 2010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간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어 합의가 도출되고, 추가협상 결과를 정리한 “합의 요지(Agreed Elements)”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합의 요지를 기초로 한·미 양국 실무진은 2010년 12월 17-20일(시애틀)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동 합의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협상 합의 도출로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결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동 합의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전략적 의미에서 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연되어온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의 실현,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 ASEAN·인도·EU에 이어 미국을 실질적인 우리 경제영토로 확장하는 효과 외에도 한·미 양국간 전반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또한, 미국 역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외에도 대아시아 중시 정책을 진전시키고,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불, 대세계 무역수지는 20.0억불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10년간 실질 GDP는 6.0%(약 80조원),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7년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연간 약 15.2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 한·EU FTA 서명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2009년 기준)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EU와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 6일 한·EU 통상 장관이 함께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거쳐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시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6일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스티븐 바나케르(Steven Vanackere) EU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과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공산품에 대한 EU의 관세는 교역액 기준으로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100% 철폐되고, EU 공산품에 대한 우리의 관세는 5년 내 97%가 철폐된다. 또한 한·EU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특히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와의 FTA는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U(5.3%)는 미국(3.5%)보다 평균관세율(2009년 기준)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



한·EU FTA 정식 서명식 (2010.10.06, 벨기에)

기 때문에 한·EU FTA는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상임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1월 26일-12월 6일간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경우, 유럽의회 상임위에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한·EU FTA 동의안 처리 후 동 법안들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는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전제로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

## 3) 한·인도 CEPA 발효

한·인도 양국 정부는 갈수록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6년 3월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12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한·인도 CEP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인도 CEP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비준 및 발효가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2009년 8월 26일 국회에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우리 국민과 경제계의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09년 11월 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양국 정부의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의 대인도 수출의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3%, 수입액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 및 평균 관세율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개방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기준은 인도가 기존에 체결한 FTA보다 한층 완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한·인도 CEPA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DDA 협상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외국 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등의 경우, 양질의 저렴한 인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투자분야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자유화하는 한편,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 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된 이후 1년간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43%, 수입은 3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액도 역대 최고치인 171억불을 기록하였고, 인도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역시 49% 증가하여 58억불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한·인도 CEPA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가 2011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1억 5천만명의 인구와 세계 제4위의 구매력을 보유한 인도는 최근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효과만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대인도 수출은 17억불, 무역 흑자는 14억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속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제고되고,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간 전문가 교환이 촉진되어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

### 1) 한·중 FTA 추진 여건 조성

2007년 3월에 출범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0년 5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의 계기에 종료되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모두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 FTA의 부문별 영향을 제시하고, 서비스·규범 분야의 양국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고 부분에서는 ① 포괄성 ② 실질적 자유화 ③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④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⑤ 지속가능한 개발의 5개 원칙에 대한 공통 이해를 도출하는 한편, 협상 출범을 결정하기에 앞서 서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가 2010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민감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한·중 FTA의 가능한 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사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감성 관련 정부간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적절한 시점에서 협상 개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2) 한·일 FTA 재개 여건 조성

한·일 양국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관심사항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중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 2009년 중 2차례의 심의관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양국간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29일 한·일 정상회담시 실무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9월 16일 동경에서 제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일본내 비관세장벽(NTB) 문제 등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및 상품 자유화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였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부품소재 산업 등 우리의 제조업계도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FTA를 통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FTA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2009년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3국은 2010년 1월 준비회의를 거쳐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 동 공동연구의 종료 등 공동연구의 운영세칙에 대해 합의하고, 6년(2003년-2009년)간 진행되어 왔었던 민간공동연구의 결과와 3국의 경제·통상관계를 검토하였다. 2010년 9월 1-3일간 동경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FTA에서 다루는 상품, 규범, 협력 분야에 대해, 2010년 12월 1-3일간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 3국간 정책과 기체결 FTA의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나갈 예정이다.

동북아시아 3국간 FTA는 아세안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한·중·일 주도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산관학 공동연구를 충실히 진행하여 3국간 FTA 체결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3. 자원 부국 및 전략적 지역거점 국가와의 FTA

### 1) 한·페루 FTA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한·페루 양국 정부는 보완적 성격이 강한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0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시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회기간 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10년 8월 30일 페루 리마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한·페루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201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개시하였다.

한·페루 FT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원산지 기준은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개방한 분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고, 페루는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우리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정부조달 및 민



한·페루 FTA 가서명식(2010.11.15, 서울)

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양국 기업의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페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 국가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페루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우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페루는 아연, 주석, 납, 동 등 전략적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신흥산유국 및 천연가스 공급기지로서 현재 우리 기업이 남미 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페루 FTA 체결로 페루는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2) 한·호주 FTA 협상 진행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자원 수출국이자 농업개혁정책과 선진기술을 갖춘 농업선진국으로서,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공산품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호주 FTA 협상 논의는 2007년에 실시한 FTA 민간공동연구, 2008년 4월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그리고 2008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한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9년 3월에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5월, 8월, 11월에 걸쳐 세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3월과 5월에 각각 제4차 협상과 제5차 협상을 개최하였고, 8월, 10월, 11월에는 회기간 회의도 가졌다. 그 결과 양국은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통관, 무역 관련 기술 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신, 노동, 환경,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정문 챗터에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챗터도 일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다. 양허안 협상도 양국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로 압축되어 협상 타결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호주 FTA는 우리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농업분야 협력을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진행

콜롬비아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제3위의 소비인구(약 4,600만 명)와 제5위의 경제규모(약 2,300억불대의 GDP)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중견국가이자 자원부국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 중남미의 주요 협력 대상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콜롬비아의 중남미 지역내 전략적 입지를 고려하여 FTA 체결을 통한 콜롬비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와의 FTA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의 대콜롬비아 시장 확대와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관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양국 민간 기관이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한·콜롬비아 FTA 추진을 권고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공청회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에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3월, 6월, 10월에 걸쳐 3회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5월과 9월에는 회기간 회의도 가졌다. 그 결과 양국은 서비스, 무역관련기술장벽(TBT), 경쟁,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성, 총칙, 분쟁해결, 최종규정, 통관, 정부조달, 일시입국 등 협정문 12개 챗터에 합의하였으며, 위생 및 검역(SPS), 무역구제, 원산지, 투자, 지적권 등 나머지 10개 챗터도 대부분의 비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상품 시장접근 협상에서도 2010년 9월과 12월에 수정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논의를 심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인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며,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4) 한·터키 FTA 협상 출범 및 진행

한국과 터키는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공동연구(2008.6-2009.5) 결과를 토대로 FTA 협상 개시를 모색하였다. 2010년 3월 1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Zafer Çağlayan) 터키 대외무역담당 국무장관은 터키 앙카라에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였다. 협상 출범

이래 한국과 터키는 2010년 4월과 7월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는 7천2백만에 달하는 인구에 따른 높은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터키와의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주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진행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원목, 석탄, 알루미늄, 가죽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원이기도 한 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 상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한·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양국은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 정부간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가졌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2009년 3월 3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국은 2009년 6월, 9월, 12월에 걸쳐 세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다. 2010년 5월에는 제4차 협상을 개최하여, 원산지, 서비스, 투자 및 기타규범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양국간 협상의 이익균형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추가 공식협상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후 7월에 진행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6) 한·GCC FTA 협상 진행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간에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2008년 7월에 한·GCC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9년에 2차례의 협상(2009년 3월, 7월)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양측은 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및 정

부조달 양허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정부조달, 경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초 GCC측은 FTA에 대한 GCC 차원의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면서 동 타당성 연구 종료시까지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중에 GCC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일본, 중국 등과 FTA 협상을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정부는 2010년 6월 통상교섭본부장과 GCC 사무총장간 면담 및 2010년 7월 제15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GCC로부터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GCC FTA는 경제 교류 확대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완료

한·이스라엘 양국은 2009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한·이스라엘 공동위원회 계기에 FTA 공동연구를 개시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년 8월, 9월과 2010년 4월 3차례 회의를 토대로 2010년 8월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동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국의 산업구조적 보완관계를 고려할 때,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상품무역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 경제협력 증대와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FTA 추진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8) 한·중미 FTA 공동연구 개시

2010년 6월 개최된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회의시 FTA 추진 논의에 따라, 양측은 추진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동 공동연구에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외에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중미 국가가 합류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공동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미국가들과의 FTA는 한·중미간 경제, 통상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동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9) 한·베트남 FTA 공동 작업반회의 출범

베트남은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한·ASEAN FTA에서 상품시장 자유화 일정이 여타 ASEAN 국가에 비해 늦고,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MFN 관세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보다 낮아짐에 따라, 한·ASEAN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한·베트남 양자간 FTA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10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한·베트남 FTA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작업이 2009년 12월부터 착수되었고, 2010년 3월 22일 한·베트남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작업반 설치 및 운영지침이 합의되면서 공동작업반 추진이 구체화되었다.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회의는 2010년 6월(서울)과 10월(하노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2011년 내에 양자간 FTA 추진에 대한 주요 이슈를 협의하여 공동작업반 협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 5. APEC 지역통합 논의 참여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 방안의 하나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AP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제2차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서 보고르 목표(Bogor Goal)<sup>1)</sup> 달성방안의 하나로 FTAAP 창설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장기적 과제로 FTAAP를 포함하여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 보고서(REI Report)'를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및 페루와 공동으로 「FTAAP 관련 기존 연구 분

1) 보고르 목표(Bogor Goal)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APEC 국가 사이에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지역경제통합 분야 주요성과의 하나로 평가받은 바 있다. 2009년에 우리나라는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주도하여 FTAAP 추진 방안 검토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0년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칠레, 페루와 함께 FTAAP 도전요인 극복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배양 수요조사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고, 개도국의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FTAAP 창설방안(pathways)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FTAAP 추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유의하고, 민간 기업인들의 의견 및 회원국간 정치·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장기적 목표로 APEC 차원의 FTAAP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 6. 기발효 FTA의 효과 극대화 노력

### 1) 한·칠레 FTA 이행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2003년 2월 서울에서 협정이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으며, 2010년 발효 6주년을 맞이하였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발효 직전 연도인 2003년의 약 16억불에서 2010년 72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은 5억불에서 29억불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11억불에서 42억불로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칠레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우리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동(copper) 제품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 백만불, %)

연도	대칠레 수출액	대칠레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3	517	1,058	1,575	-541
2010	2,947 (470.0)	4,221 (299.0)	7,168 (355.1)	-1,274 (-135.5)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직전 연도 대비 증가율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10년 말까지 총 7차례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와 분야별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에 개최된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화상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6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칠레 FTA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의 FTA 정책 및 추진현황과 무역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정 발효 6년간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협정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 한·싱가포르 FTA 이행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에 서명되어 2006년 3월 2일에 발효하였으며, 2010년으로 발효 4주년이 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발효 직전 연도인 2005년 127억불에서 2010년에는 약 2배인 231억불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74억불에서 152억불로 106%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억불에서 79억불로 48% 증가에 그쳐 싱가포르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1억불에서 74억불로 25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량 및 수출액 증가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 이전 사실상 무관세국가였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셈이 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 백만불, %)

연도	대싱가포르 수출액	대싱가포르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5	7,407	5,318	12,725	2,089
2010	15,244 (105.8)	7,850 (47.6)	23,094 (81.5)	7,394 (253.9)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직전 연도 대비 증가율

한·싱가포르 FTA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은 2009년 1월 15-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차 이행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행검토회의에서는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행 관련 양국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3) 한·EFTA FTA 이행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여 2010년으로 발효 4주년을 맞이하였다.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량은 발효 직전 연도인 2005년의 29억불에서 2010년 92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과 수입은 각기 11억불에서 35억불로, 18억불에서 57억불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역시 동 기간중 7억불에서 22억불로 약 3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가 가공무역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 기계류, 선박용 부품 등 공업용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을 상당부분 EFTA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 백만불, %)

연도	대EFTA 수출액	대EFTA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5	1,090	1,818	2,908	-728
2010	3,522 (223.1)	5,699 (213.5)	9,221 (217.1)	-2,177 (-199.0)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직전 연도 대비 증가율

EFTA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금 등 일부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입 면에서는 노르웨이산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특수선박을 제조한 후 노르웨이로 무관세 수출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무관세로 재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한·EFTA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08년 5월 서울에서 한·EFTA FTA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1월에는 제네바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한·EFTA 양측은 한·EFTA FTA의 원산지기준, SPS·TBT, 협정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4) 한·ASEAN FTA 이행

한·ASEAN FTA 협상에서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국과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대부분의 FTA 협상에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Single Undertaking) 대신에

분야별로 협상 시기를 달리하는 순차적인 협상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고,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3개의 협정이 모두 발효됨으로써 2004년 11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 정상은 합의한 한·ASEAN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이 2009년 2월 27일 2개의 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우리 기업은 한·ASEAN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타결되고 원활한 이행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ASEAN 회원국에 대해 수출한 금액은 협정 발효 직전 연도인 2006년의 321억불에서 2010년 532억불로 66%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한 금액은 297억불에서 441억불로 48%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간 교역액은 협정 발효 직전 연도인 2006년 618억불에서 2010년 973억불로 57%가 증가하여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ASEAN FTA 발효 이후 교역증대

(단위 : 백만불, %)

연도	대ASEAN 수출액	대ASEAN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2006	32,066	29,743	61,809	2,323
2010	53,195 (65.9)	44,098 (48.3)	97,293 (57.4)	9,097 (291.6)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는 발효 직전 연도 대비 증가율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ASEAN FTA 이행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 10월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2010년 중 두 차례에 걸쳐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ASEAN FTA의 이행현황 점검,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혜 관세를 정보 확산, 원산지 서식 간편화, ASEAN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한·ASEAN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체 방안을 ASEAN측과 협의하였다.

우리나라와 ASEAN 양측은 발효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FTA의 활용률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중 두 차례의 FTA 이행위

원회, 2010년 8월 한·ASEAN 통상장관 회담(베트남) 등 계기에 한·ASEAN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민감품목의 자유화,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의 변경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향후 개최될 이행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민감품목의 추가 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와 ASEAN의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 2011년 3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서울)에서 최종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제3절

##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 1. 에너지협력 외교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6.2%를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의 82%를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은 항상 경제성장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협력 외교가 국가의 생존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정부는 2010년에도 정상급 에너지협력 외교의 활발한 전개,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및 국제 에너지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협력외교를 추진하였다. 태양광·풍력 등의 수출산업화에 매진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전년대비 2배 증가(2009년 24억 달러→2010년 47억 달러)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2009년 9%),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27%(2009년 25.1%)로 제고되었다.

## 1) 정상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2009년 이래 2010년에도 계속된 이상득 특사의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 방문은 우리 에너지협력외교를 전략적 차원으로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의 모멘텀을 마련하였다. 볼리비아 리튬개발,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 등 광물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우간다 유전개발, 페루 유전탐사, 콜롬비아 유전, 에콰도르 정유공장 등 석

유자원 확보와 정유사업 진출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 해상광구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아제르바이잔 석유화학, 남아공 원전사업 등 각종 에너지관련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협력국가의 유력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각 지역별로 분포하는 자원부국들과 이루어진 정상급 회담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기반 역시 마련하였다. 캐나다(1월), 콜롬비아(6월), 멕시코(7월), 볼리비아(8월), 에콰도르(9월), 칠레(11월), 브라질(11월), 페루(11월) 등 미주지역을 비롯하여 요르단(1월), 우즈베크(2월), 카자흐(4월), UAE(5월) 등의 중동지역과 러시아(10월) 및 호주(10월), 말레이시아(12월)등 아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정상급 회담 개최는 에너지협력 외교를 위한 우리 역량의 적극적 전개를 반증한다.

한편 박영준 국무차장의 가나, DR콩고 방문(6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의 10월 중동, 아프리카 순방(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및 12월 동남아 3국 순방(베트남, 라오스), 총리실 에너지협력외교 실무대표단 3국 방문(우즈베크, 아제르, 헝가리)지원 등 관계부처의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외교를 활성화하였다.

## 2)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주요 자원부국과의 전반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5월)을 개최하였으며, 해외 에너지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조사단(3월), 중남미 카라반 대표단(9월, 아르헨·브라질·파라과이)을 파견하였으며, 에너지자원 대사의 인솔 하에 민관합동 대표단을 휴스턴,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11월), 알제리, 나이지리아(12월) 등에 파견하였다.

## 3) 원전수출 적극 지원외교 전개

UAE 원전 4기 수주 및 요르단 연구로 수주를 계기로, 2010년부터 터키, 남아공, 아르헨, 필리핀 등 20여개국으로부터 한국원전 협력요청이 쇄도하게 됨에 따라 원전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기획부 장관 방한을 통해 원전 협력 MOU(9월)가 체결되었으며,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과는 원자력 협정을 협의중에 있다. 현재 남아공·일본 등과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UAE 원자력협정(1월)은 발효까지 마친 상태이다.

터키 시립원전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 실무협상을 지원하였으며,

주 터키대사는 터키 총리, 에너지장관을 수시로 면담하였다. 이집트·체코·헝가리(9월), 슬로박(11월), 태국(12월) 등에서는 한전과 함께 한국 원전(APR 노형) 홍보를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2. 국제 에너지협력 및 사업 지원

### 1) 국제 에너지협력 외교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에너지포럼(IEF) 등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국제에너지 시장 안정화 등 국제 에너지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 1월 출범한 국제재생에너지 기구(IRENA)에 적극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수출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IRENA 창설 초기부터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원회 의장직을 수입하고, 사무국에 우리정부 직원을 파견, IRENA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여해왔다.

2010년 10월에는 아태지역 17개 회원국을 초청, IRENA 아태지역 정책자문 워크숍을 IRENA 지역 워크숍으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0월 24-25 양일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IRENA 제 4차 준비위원회에 에너지 자원대사가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사업 진출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사업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였다. 국제 유가스전 입찰의 예를 들어보면, 가스공사의 이라크 슈바이르 유전(66억 배럴)과 바드라 유전(8억 배럴), 아카스 가스전(5.6tcf), 만수리아 가스전(4.5tcf) 낙찰을 지원하였으며, 석유공사의 쿠르드 지역 진출도 지원하였다.

한편 2009년 12월 한·UAE 양국 정상회담이 합의한 한·UAE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UAE와 원전교육, 재생에너지, ICT, 조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전의 UAE 원전 4기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였다.

## 3.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제고

### 1)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주요 자원부국에 소재한 에너지 협력공관 75개를 거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보 수집,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현지 에너지 전문가를 공관장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에너지 보좌관 사업을 2009년 19명에서 2010년 28명 및 5개 컨설팅회사로 확대하였으며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외교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신흥개도국에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을 위한 주재관 20명을 증원하여 에너지협력 외교 역량을 강화하였다.

### 2)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우리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75개 에너지 거점공관 등에서 수집한 주요 정보를 “해외에너지자원 홈페이지(energy.mofat.go.kr)”를 통해 전파하고, 매주 “주간국제에너지자원동향”을 발간하여 에너지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로 배포하는 등 에너지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전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8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가이드 2010” 영문판 책자 및 CD 1,000부를 발간하여 전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 제4절

##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 1.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외교

## 1)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제적 논의 주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외교통상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 및 국제적 패러다임 확산을 주도하였다.

2009년 6월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당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Declaration on Green Growth)’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0월 28일 ‘한·OECD 녹색성장전략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각국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에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녹색성장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반영시켰다.

그에 앞서 5월 인천에서 열린 ESCAP 총회에서는 역내 녹색성장 모범사례 공유 및 회원국 녹색성장 정책 수립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유엔 차원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6월 16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 후원 및 녹색성장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East Asia Climate Forum 2010)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출범을 선포하여, 녹색성장 주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를 제고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특화되고 통합된 물 관리 협력 방안 추진’을 위해 7월 1-2일간 서울에서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주최로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물 관리 아·태지역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물 분야의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물 산업의 국제적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홍보

우리나라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칸쿤 기후변화총회) 등 각종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비전과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 the 18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치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에 위치한 우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각 공관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칸쿤 기후변화총회 개최에 앞서 발간된 ‘Climate Change, the New Economy’지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리는 등 녹색성장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 1) Post-2012 기후변화협상 현황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08-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협상(이하 Post-2012 기후변화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래로 연 약 5회의 강도 높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 총 5차례의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합의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주요 쟁점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협상 진전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9일-12월 10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칸쿤 기후 변화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가 채택되었으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우리의 대응

교도의정서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산업구조상의 특성도 상이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되, 우리의 국력과 경제여건에 상응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자발적 감축목표치를 설정하여 2009년 11월 17일 최종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2020년까지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이라는 감축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권고한 최고수준의 감축범위로, 이는 강력한 녹색성장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서 선진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는 메카니즘인 개도국의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엔기후변화총회의 핵심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Common Space'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환경협력 강화

###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인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

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가 2010년 5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어 지난 2009년 북경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인식 등 10대 우선환경협력분야의 이행을 위한 3국 공동행동계획(환경협력에 대한 3국 공동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2010년 9월 제13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제15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현재 이행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010년 3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제15차 고위급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어, 지속가능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국가정책, 에너지효율 표준, 탄소배출량 표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한·중·일·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제15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간회의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2011-2015년 중장기 전략, 사무국 위임사항 수정, 신탁기금 증액 방안, 자원동원 전략 및 대중인식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로 산재된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총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Fauna and Flora),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

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범지구적 환경협력 논의 차원에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생물자원을 공유 시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2012.10) 제주 유치,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2011년 제10차 당사국총회 경남 창원 유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 등을 통해 세계 환경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제5절

# 양자·다자 통상외교

## 1.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 1) 한·중 통상외교

한·중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2004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 결과 양국의 협력은 양자문제에서 지역적·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에서 2010년 1,884억달러로 약 29배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2010년에는 중국이 우리 총 수출의 25%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교역 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한·중 교역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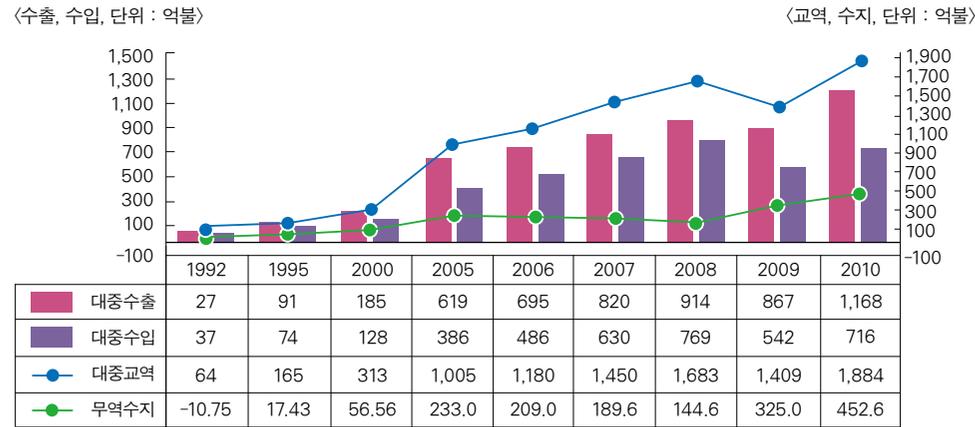
(단위: 억달러)

	1992년	2010년	증가량(배)
수출	27	1,168	▲43
수입	37	716	▲19
수지	-10.7	452.6	-
총액	64	1,884	▲29.4

\*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3억달러를 기록한 이래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452.6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양국은 무역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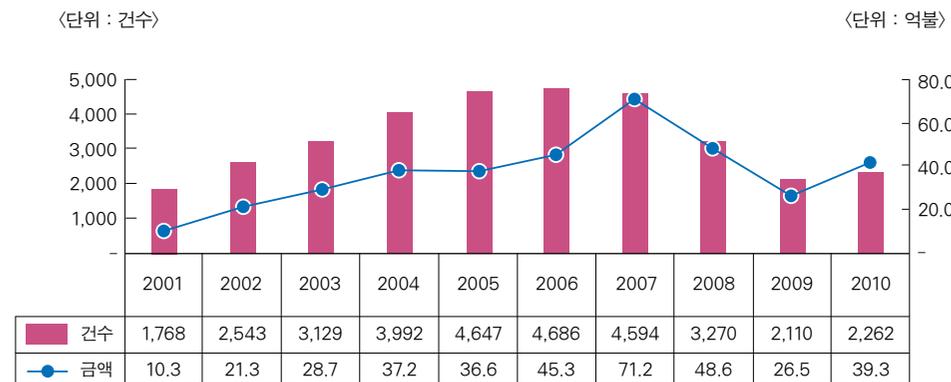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중 교역 동향〉



\*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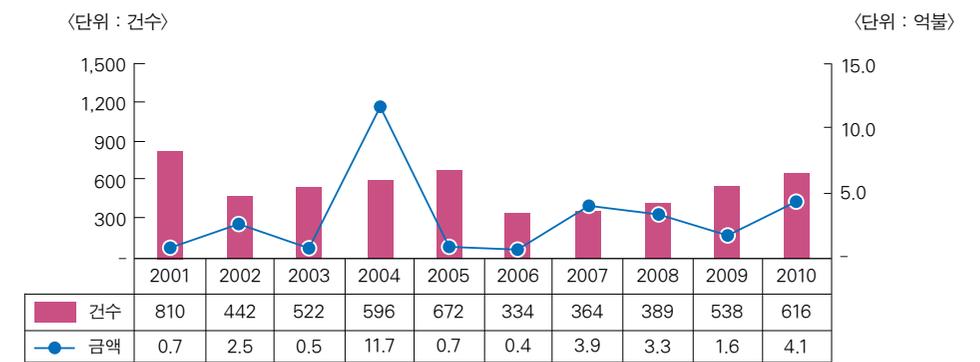
또한 투자면에서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의 대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2,353건, 448.5억 달러에 이른다. 양국간 상호방문객 수가 2007년 585만명, 2008년 513만명, 2010년에는 595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적 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동향〉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한 투자 동향〉



\* 출처: 지식경제부

양국 정상은 2008년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 한·중 FTA 추진, 환경보호·에너지·통신·금융·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는 3차례의 공동작업반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어 2009년 10월 10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되었다. 동 보고서는 향후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지침서로서, 23개 산업 및 기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경제공동위, 무역실무회담, 검사검역협의체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들은 사전에 점검하고 양측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및 고위인사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중국 경제동향 및 통상환경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한·중 경제통상외교 정책에 반영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예정이다.

## 2) 한·EU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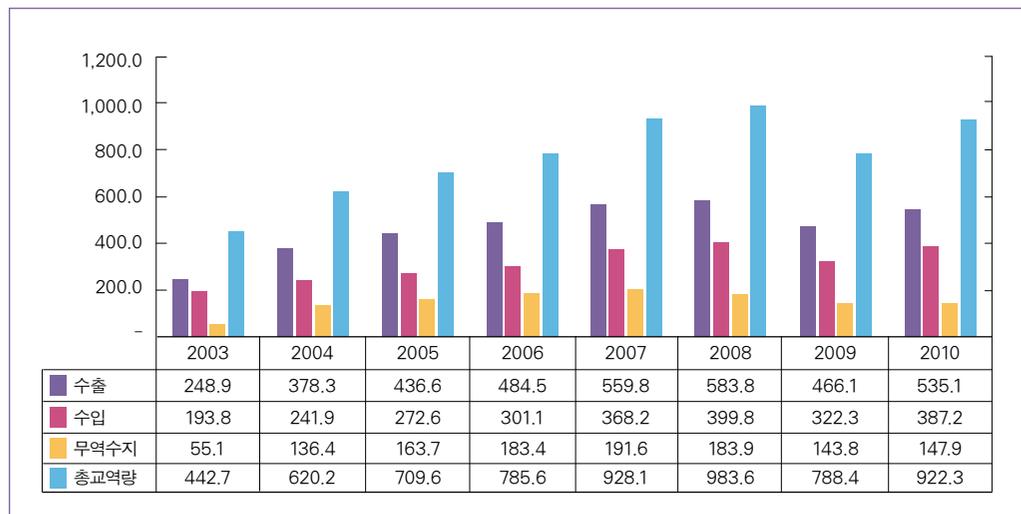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구 5억 110만명<sup>①</sup>의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EU 통상관계도 양적증가는 물론 질적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3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제1위의 대한국 투자주체이며, 우리는 EU의 제9대 교역 대상국으로, 양자간 통상·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지난 2010년 10월 6일 한·EU FTA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양측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EU는 2011년 2월 17일 유럽의회가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자간 교역관계가 한층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10년 한·EU 교역규모는 922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10.3%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535억불로 전체 수출의 11.5%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구조물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EU수입액은 387억불로 전체 수입의 약 9.1%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용 제조장비,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이 중심이었다.

### 한·EU 교역현황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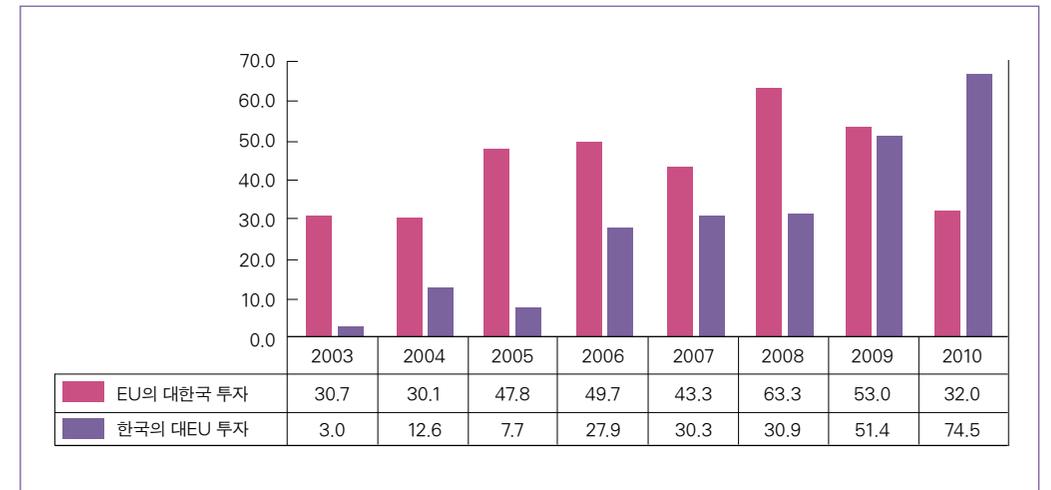
\* 출처 : 한국무역협회

①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한·EU간 투자 측면에서도 EU는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주체로서, 2010년 기준으로 총 누계 투자액은 약 597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331억불에 이르고 있다.

### 한·EU 투자동향

(단위 : 억불, 신고기준)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양측간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한·EU 양측은 2006년 2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가서명을 거쳐 2010년 10월에 정식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EU는 '한·EU FTA' 협상 출범(2007년 4월) 계기에 양자간 경제통상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8년 5월에 동 협정의 개정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가서명을 하여 2010년 5월에 정식서명을 하였다. 양국 정부는 '한·EU FTA' 및 '한·EU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EU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09년 한·EU 정상회담(5월 23일, 서울)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이와 더불어 한·EU간 통상협상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양측은 2001년부터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공동위원회를 번갈아 개최하여 경제동향, 양자간 통상협안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8차 한·EU 공동위원회가 2010년 3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정례협의체 및 수시협의를 통해 한·EU간 통상협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확대되어 한·EU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만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상품의 대EU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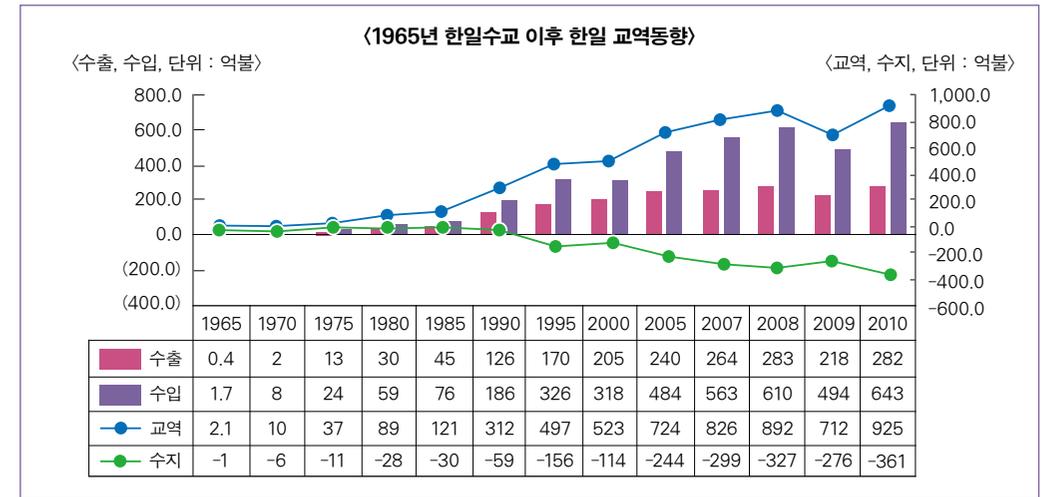
통상협안 중 우리측 제기사안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 PSF(폴리에스터 단섬유) 등 우리 제품에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해결, 독일세관에서 부과한 한국산 다기능 휴대폰 관세 환급, 소나무 분재의 수입허용기간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EU측 제기사안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는 프로피온산 함유 에멘탈 치즈의 수입 허용 문제와 관련, '프로피온산 미첨가 증명서'를 첨부시 검사에서 제외키로 하여 EU산 에멘탈 치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들 수가 있다.

### 3) 한·일 통상외교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간 양국은 투자, 사회보장, 세관 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925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수출 제3위, 수입 제2위)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수출 제3위, 수입 제6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대일 무역수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무역적자 규모가 300억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이러한 무역적자의 급증은 양국간 수출입이 각각 30%씩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전체 교역규모 대비 무역적자의 비율은 2009년 약 73%에서 2010년 약 67%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대일 무역적자의 비중이 큰



\* 출처: 한국무역협회

부품·소재 분야의 한·일간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개최된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상담회」는 양국간 부품·소재 산업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구미, 익산 등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일본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양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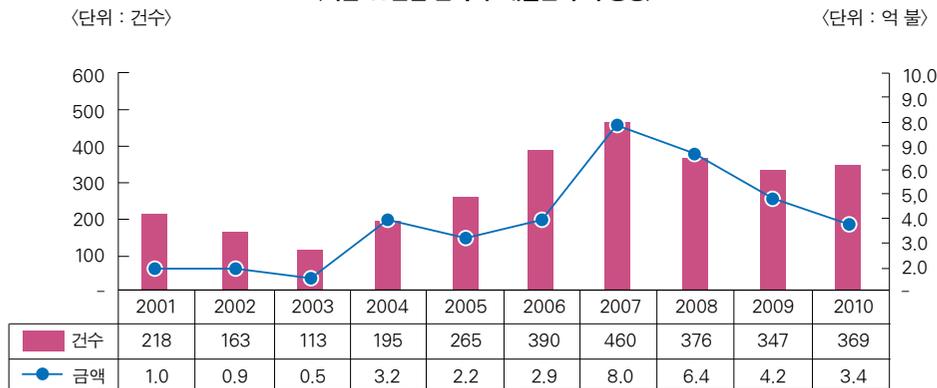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대한민국 투자 국가로서 1962-2010년 대한민국 투자액의 15.0%를 차지한다.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는 1999-2000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래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0년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는 다시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대응,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동향〉



\* 출처: 지식경제부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투자 동향〉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일 양국은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외교장관 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고위경제협의회,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등 양자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1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협력,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한·일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한·일 고위경제협의회(2010.12) 및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2010.6) 개최를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4) 한·미 통상외교

한·미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2010년 한·미 교역규모는 902억불로 전년도(667억불)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현재 미국은 중국·일본·EU에 이어 우리의 제4위 교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7위 교역 상대국이다.

2010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498억불로 전체 수출의 10.7%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404억불로 전체 수입의 약 9.5%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미 교역현황

(단위: 억달러)

	수출	수입
	498억불	404억불
주요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	반도체 제조용장비,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등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미 교역 동향〉

〈수출, 수입, 단위: 억불〉      〈교역, 수지, 단위: 억불〉



\*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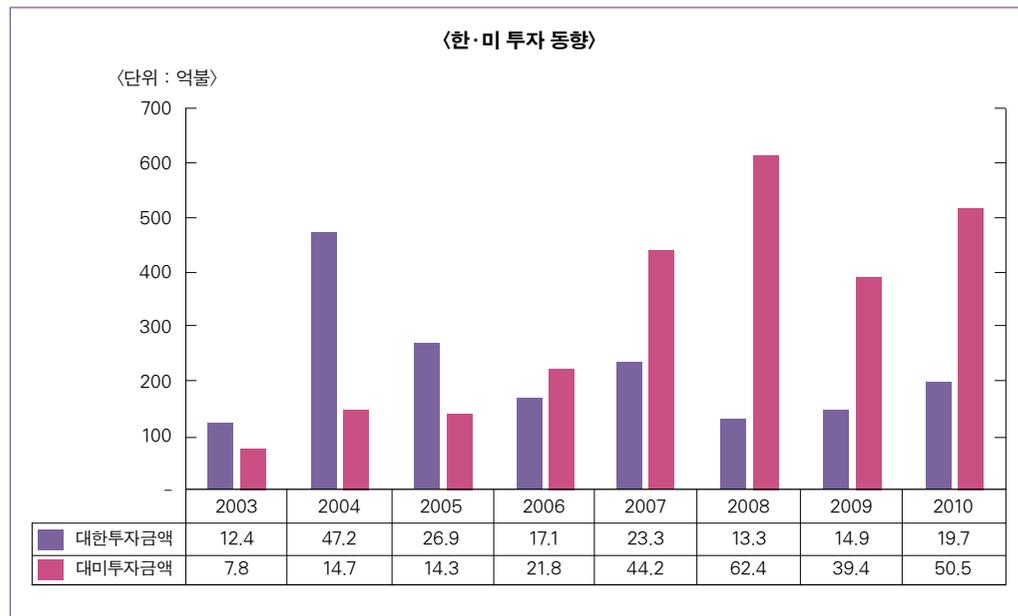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서 1968-2010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누계액은 약 408억불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총액(2,408억불)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EU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제2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0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약 438억불에 달한다.

2010년 한·미 투자동향 표

(단위: 억 불)

	대미투자	대한투자
2010 투자액	50.5	19.7
투자 누계액	408.0(1968-2010)	437.8(1962-2010)

\* 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한·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 기준으로 전반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내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sup>2)</sup>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미간 경제의존도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sup>3)</sup>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중요한 교역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

2) 전체수출(수입) 중 대미수출(수입) 비중은 2000년 21.8%(17.3%)였으나 지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10.7%(9.5%)를 기록하였다.

3) 2010 미국 GDP → 14조 6200억 달러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

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서명 이후 한·미 FTA합의내용에 불만을 품은 미국내 일부 여론 때문에 3년 5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하던 동 협정은 2010년 12월에 한·미 FTA 관련 양국 통상장관회담간 추가협상이 타결되어, 한·미 FTA의 비준·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위생 및 검역(SPS) 유전자변형식품(GMO), 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 등 여타 한·미간의 주요 통상 현안들도 원만히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통상문제 협의를 위해 매년 워싱턴과 서울에서 교대로 2-3차례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2차례(5.4-5, 9.15-16)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미 통상협회는 분기별 국장급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2001년도에 시작된 이래 2010년에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통상 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례협의체 및 수시협의를 통해 한·미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확대되어 한·미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만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상품의 대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통상현안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 감귤의 수입허용조건이 2010년 10월 12일자 미 연방관보에 최종 고시되어, 한국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미측이 제기한 사안중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용타르색소 사용 제한에 대한 미측 우려가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소된 것을 들 수 있다.

## 2.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WTO 다자간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외국정부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조사개시만으로 수출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의 규제당국과 직접 접촉·대응하여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2000년 9월 지역통상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담은 정부입장서를 관계국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시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업계 및 정부입장을 전달하며, 양자 고위급 회의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총 123건이며 이 중 반덤핑 조치가 96건, 상계관세 조치가 4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23건으로, 수입규제 조치에서 반덤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이지만 반덤핑의 경우, 개별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아닌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에서도 기업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 조사당국에 분명히 함으로써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도,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수입 상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강화, 라벨링 규제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입규제 대책반은 △정부 입장서 전달, △고위직 서한 발송, △정부간

협시 의제화, △상대국 정부에 대한 구두 교섭,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였으며, 이 중 14건에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 6천만불에 달한다. 이 금액을 수출을 통해서 획득하려면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할 때 약 74억불을 수출해야 한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앞으로도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활동

###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대응논리를 구성

### - 수입규제국과 정부간 양자협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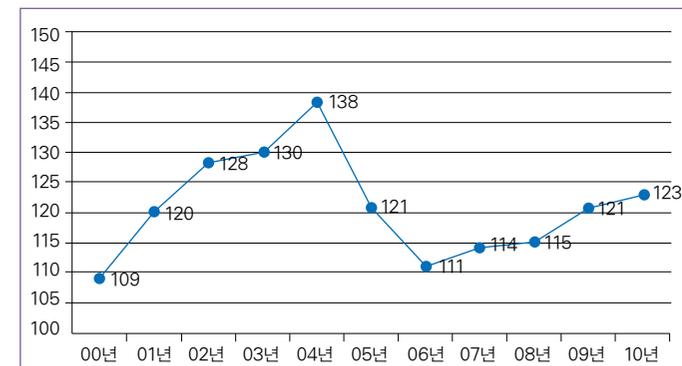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간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업계 및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요청

###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

연도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2010.12.31 기준)

총 123건 (조사 중 20건 포함)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1. 인도	24(4)	0	0	3(1)	27(5)
2. 중국	19	0	0	0	19
3. 인도네시아	1	0	0	5(5)	6(5)
4. 파키스탄	6(2)	0	0	0	6(2)
5. 말레이시아	2	0	0	0	2
6. 태국	2	0	0	0	2
7. 일본	1	0	0	0	1
8. 미국	11	0	4	0	15
9. 캐나다	2	0	0	0	2
10. EU	4	0	0	0	4
11. 터키	6	0	0	5	11
12. 호주	2(1)	0	0	0	2(1)
13. 러시아	1(1)	0	0	5	6(1)
14. 우크라이나	1	0	0	3(1)	4(1)
15. 남아공	3	0	0	1	4
16. 이집트	2	0	0	0	2
17. 브라질	4(3)	0	0	0	4(3)
18. 아르헨티나	4(2)	0	0	0	4(2)
19. 멕시코	1	0	0	0	1
20. 필리핀	0	0	0	1	1
<b>합계</b>	<b>96(13)</b>	<b>0</b>	<b>4</b>	<b>23(7)</b>	<b>123(20)</b>

2010년 수입규제 대응 실적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천 USD)	비고
1 LCD 모니터 품목분류 (벨기에)	120,000 ('04.3월-12월 수출액)	14%	20,000 (관세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감안)	벨기에 정부는 '04.3월-12월에 수출된 LG LCD 모니터를 비디오모니터(14%)로 분류하여 12백만 유로의 관세추징을 통보('07)하였으나, '10.3월 컴퓨터모니터(0%)로 재분류하여 동 관세추징을 취소
2 PSF 반덤핑(EU)	130,000	5-10%	6,500-13,000	한·EU 공동위시 이의제기를 통해 PSF 반덤핑 재심 종료
3 PVC 반덤핑 (호주)	1,200	9-34%	108-408	한국산 제품이 호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관계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4 철강 세이프가드 (GCC)	360,000	25%	90,000	우리 업체 생산 제품은 제품 규격이 다르므로 규제대상제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수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종결 결정
5 가성소다 세이프가드 (인도)	9,000	15%	1,350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인도상무부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 종결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천 USD) <sup>4)</sup>	비고
6 철선로프 우회덤핑(EU)	106,200	60%	63,720	파산, 수출량 없는 3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우리 업체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60.4%) 면제
7 타이어 강제인증 (인도)	2,800	-	2,800 <sup>5)</sup>	타이어에 BIS(표준청)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여 미획득시 인도내 수입·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인도측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시행시기 12개월 연장
8 라벨링 규제	500,000	-	금액으로 산정 불가	자국어 표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전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행시기를 8개월 연장하고, 중간재는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
9 TPA 반덤핑 (중국)	2,600,000	7.5-9%	195,000-234,000	제소자가 주장한 11.26%의 관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3.7%의 관세 부과 최종 판정. 아울러, 일부 우리 업체는 상당량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10 PET Chip (EU)	310,000	-	-	반덤핑관세율 0%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재심을 계속하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남을 주장하여 조치 종결 유도
11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반덤핑 (EU)	52,000	5.1-9.8%	2,652-5,096	우리 제품은 조사대상품목과 규격이 다름을 주장하여 초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 결정 유도
12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독일)	-	-	관세환급액 8,270	독일 세관이 다기능휴대폰을 TV(14%)로 품목 분류한 것에 대응하여 휴대폰(0%)으로 분류 결정 및 관세환급 결정 유도
13 합금철 세이프가드 (우크라이나)	25,000	15%	3,750	수입의 증가와 제소자가 주장하는 국내산업의 피해와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지적, 조사 종결을 유도
14 PET 필름 반덤핑(중국)	62,198	13-33%	8,086-20,525	일몰 종료
<b>합계</b>	<b>4,278,398</b>	<b>-</b>	<b>402,236-462,919</b>	

3.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1) DDA 협상 경과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4)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5) 2009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이 중단된 경우 손해액으로 성과 계산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개도국간 입장 대립으로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9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 협상은 발족 이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기본골격(일명 July 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개최, 2006년 7월 협상 일시 중단,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 협상 재개,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의 잠정 타협안 도출에 이은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 등 부침이 있었다.

2010년에는 비록 2009년 제7차 각료회의시 설정된 조기타결 목표의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3월 협상현황 점검(stock-taking) 회의, 각 협상 분야별 각테일 접근법(cocktail approach) 도입, 소그룹 대사급 회의 등 다양한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진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DDA 타결을 위한 수준 높은 정상선언문이 도출되어 DDA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1월 30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상세 작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협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2) 우리의 활동 성과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미국과 주요 개도국간의 대립각 형성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2010년에는 우리나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치적 의지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하에, 주요 각료급, 정상급 회합 계기를 활용, 2008년 잠정타협안에 기초한 DDA 협상 조속 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다보스 포럼 계기 DDA 통상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통상장관회의, APEC 통상장관회의, 20개국/23개국 제네바 비공식 SOM 회의(5.19-20, 7.7-8, 10.13, 11.23),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시에는 주요국과의 치열한 막후 교섭 끝에 서울 G20 정상선언문에 DDA 막바지 협상(end game)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는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정상선언문을 도출하였다. 연이은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도 DD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서울 G20 정상선언에서 도출된 수준 높은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라미 사무총장은 협상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sufficient fuel)를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국내외에서 DDA 협상관련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11년도에는 이러한 G20/APEC 정상 선언을 바탕으로 부활절 기간까지 협상 분야별로 의장텍스트 수정안 회람, 하계휴가 전까지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타결, 연말까지 양허표 작성 등 강도 높은 협상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각 분야별 협상에서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농업 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구조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단과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 3)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1) 농업

2010년 농업 협상에서는 이원화된 협상 방식에 따라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sup>6)</sup> 합의 도출을 위한 잔여 쟁점 논의와 함께 자유화세부원칙 합의 이후 진행될 국별 양허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양식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동시가 이루어졌다. 전체회의 프로세스와 더불어 비록 잔여쟁점에서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이



WTO 사무총장 방한시 대통령 예방(2010년9월6일)

6)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공식, 보조금감축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허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 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루지는 못했으나, 양허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양식 등에 대한 1단계 검토를 대체로 마무리하고 7월부터 양허표를 축조하기 위한 2단계 논의로 진입하는 등 일부 기술적 이슈에서 진전을 보인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해서는 개도국 그룹과 수출국 그룹이 공히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0년 상반기부터 양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초 자료 검증(농업 총생산액, 민감품목 소비량 자료 등) 회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민감성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공조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다. 향후 협상에서도 기존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협상 진전 원칙을 토대로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회의에서는 2008년 12월 회람된 의장 4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바세샤(Luzius Wasescha) 협상그룹 의장은,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요인중 하나였던 분야별 자유화 관련 논의는 분야별 자유화 제안국 주도하에 참여국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복수국간 협의를 의장의 개입 없이 진행토록 하였고,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 이후에 본격 진행될 비관세장벽 수평적 및 수직적 제안서별 회의를 의장 주재로 진행하였다. 2010년도에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보다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집중 전개하였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산업 분야별로 전세계 교역량의 9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무세화에 참여해야 발효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협의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했으나, 주요 개도국들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주장하며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품목 바스켓 접근(Product Basket Approach)을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별 이해를 감안하여 전기·전자 분야에서 공동제안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EU, 대만, 멕시코, 중국 등 전기·전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참여국 확대 노력(outreach)에도 참여중이다. 다수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대한 참여 압력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참여 여부

가 검토되고 있는 분야는 화학, 보석 분야이며, 우리는 산업용 기계,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비관세장벽 협상은 관세의 모든 교역장애요소(기술표준, 적합성평가, 투명성, 수출·수입제한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13개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해결메커니즘(Horizontal Mechanism), 재제조품, 투명성 조항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섬유·의류 라벨링, 수출허가투명성 등 제안서가 논의되고 있으나, 2011년 4월 회람될 계획인 의장 텍스트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논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업계의 이익과 합치하는 수출허가 투명성 제안서에 2009년 3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래, 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타 주요 분야에서의 문안 협상에 대비하여 수정제안서, 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농산물 분야는 농업분야보다 품목 수가 많고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3) 서비스

서비스 협상은 크게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국내규제·규범제정협상, 규범 협상(서비스 보조금, 긴급세이프가드(ESM)조치, 정부조달 등)의 3분야로 대별된다.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각 회원국이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간, 복수국간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란 서비스 관련 총 21개 분야에서의 양허 협상그룹을 구성, 복수국간 협상방식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9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하여 왔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NAMA 모델리티 타결이 실패한 이후 DDA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09년 11월 클러스터를 계기로 양허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며, 2010년에는 2월, 3월, 4월, 6월, 9월, 11월 총 여섯 차례 서비스 협상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내규제 관련 협상은 각국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서 허가,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규제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자적 규율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의장 텍스트 2차 수정안을 토대로 작업반 및 프렌즈 회의를 12회 개최하여 회원국들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규범 관련 협상은 2010년 2월, 4월, 6월, 9월, 11월 총 다섯 차례가 개최되어 서비스 보조금, 정부조달, 긴급세이프가드(ESM)등을 논의하였으며 그중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정보교환을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 금융, 유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4) 여타 협상분야 :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환경

##### 규범

규범 협상분야는 “현행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명료화(clarify)하고 개선(improve)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2001년 도하 라운드의 지침(mandate)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덤핑 프렌즈 그룹과 수산보조금 공조국 그룹을 형성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축소와 균형있는 수산보조금 규율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중에는 전임 규범의장인 바에스-가메즈(Guillermo Valles-Galmes)가 신임 규범의장인 프랜시스(Dennis Francis)로 교체된 가운데 2008년 12월 회담된 의장 제1차 수정안 및 로드맵을 기초로 실무 협상을 통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덤핑 협상의 경우, 제로잉(zeroing), 일몰재심(sunset review), 최소부과원칙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출국, 수입국, 개도국간 이견차가 지속되었으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 사항 및 투명성 증진 조항에 관련한 기술적인 개정 작업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차 의장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2011년 1사분기 중 2회독이 완료될 전망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어족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 의장 로드맵과 각국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 범위, 어업관리제도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이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금지보조금 축소 및 일괄(catch-all) 조항의 남용 방지, 조치가능보조금(amber box)신설, 소규모 영세 어업에 대한 일반예외 신설, 자원관리제도 역할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0년 12월 협상시에는 유류보조의 일률적 금지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비공식 문서(room document)를 회람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반덤핑 협정 개정에 있어서 제로잉 금지, 자동 일몰 등 규율 강화, 수산보조금 협정문 작업에 있어서 과도한 수산보조금 금지 방지 등 우리의 핵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중심으로 한 협상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WTO TRIPS 협상은 2010년 3차례 정례이사회, 6차례 특별회의 등을 통해 기설정외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다자등록처 설치뿐 아니라, GI 특별보호 확대 및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간 관계 설정 등 2가지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EU, 스위스, 인도 등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GI 다자등록처의 수립과 함께 GI 보호 대상을 포도주·종류주가 아닌 모든 상품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출처 공개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기 위해 TRIPS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다자등록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GI 데이터베이스 구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종류주 외 상품으로 GI 특별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TRIPS와 CBD는 별개 이슈라며 특허 출원의 출처공개 의무화에도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TRIPS상 비위반·상황 제소 적용 유예의 경우, 2009년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

최된 제7차 정례 각료회의에서 차기 각료회의까지 유예 연장이 선언되어, 2011년 말로 예정된 제8차 각료회의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2006년 일본과 미국이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복수국간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ACTA 협상은 민사·형사, 국경조치 등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분야에서 TRIPS-plus 수준의 국제 기준(international framework)과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27개 회원국 포함),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1월 7차 협상(과달라하라), 4월 제8차 협상(웰링턴), 6월 제9차 협상(루체른), 8월 10차 협상(워싱턴), 9월 11차 협상(동경) 등 6차례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9월 11차 협상에서 고위급(vice minister급) 협의, 11월 conference call을 통해 모든 잔여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최종 타결하였다. 12월 법률검토를 완료하고 최종 영문 협정문을 대외공개하였다. ACTA 협정문은 서문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절차, 국경조치 등 집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상의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Colorado Group)을 형성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6회에 걸친 무역원활화 공식 협상에 참석하면서 소그룹회의, 공조그룹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상의 진전과 문안 합의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제안분야(싱글윈도우, 물품반출평균시간축정, 위험관리)에서 양자회의, 소그룹회의를 수차례 주도적으로 개최하였고, 공동 제안 분야(세관심사, 도착전 처리 등)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문 도출에 기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또다른 핵심 이슈는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문제로 공동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무역과 환경

환경협상은 1)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 2)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무역의무조항(STO : Specific Trade Obligation)과의 관계, 3)WTO와 MEA간 정보교환 및 읍저버 자격 부여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은 환경상품 자유화를 대비한 환경상품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환경상품 선정 관련, 선·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이 계속되어 선진국들은 2006년 환경프렌즈 회의시 협상의 진전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환경상품리스트를 축소·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 의장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이 제출한 환경상품을 취합하여 통합목록을 작성한 뒤 회람하는 새로운 작업일정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환경프렌즈 그룹은 비교적 컨센서스가 높은 153개 상품을 선정한 통합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뒤이어 2010년 일본,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등이 관심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다. 2010년 회원국들은 특별·정례회의(2, 7, 11월) 각각 총 3회, Friends of the system 그룹 대사급회의 및 실무회의 총 8회(4, 5, 6, 7, 10, 11, 12월)를 통해 환경상품목록 검토 및 환경 관련 제도,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도(treatment) 및 환경서비스, 개도국 기술지원(Technology Transfer),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관세장벽(NTB) 감소 및 철폐 등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4. 경제 각 분야 협력외교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원전 수출 유망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항공대국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물류기반을 강화하고, 투자보장 협정, 사회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1)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일본 총리 방한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제1차 협상에 이어, 2010년 중 4차

례 협상을 개최하여 12월 한·일 원자력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원자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7월 인도와 협상을 개최하여 원자력 협력협정 문안에 대부분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방(UAE: United Arab Emirates) 원전 수주의 경험에 비추어, 원전수출 유망국과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중 알제리와 1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쿠웨이트, 태국 등 원전수출 추진 대상국중 아직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협정을 추진코자 노력중이다.

## 2) 주요국과의 항공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주요 항공대국과 항공자유화 추진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0년 11월 한·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교통장관 회의를 한·ASEAN 항공자유화 추진을 협의하였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항공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2010년 12월 일본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나리타 구간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에 대해 협의하고, 김포·북경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와의 항공협정 체결 노력도 계속되어, 7월에는 에티오피아와 8월에는 세이셸과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 3) 투자보장, 이중과세, 사회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부족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중 짐바브웨, 콜롬비아와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크로아티아 등과 투자보장협정 체결협상을 진행하였다. 향후 에너지자원 부족 및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증가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보장 체결협상을 진행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과건 우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주요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10년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고, 스페인과 문안에 합의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부담 방지를 위하여 2010년 파나마 및 가봉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우루과이, 바레인, 가나, 예멘 등 4개국과도 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 제6절

# 통상투자진흥외교

## 1.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전 재외공관에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 지원반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KOTRA 등 공공기관 및 우리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지원반은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유치 방안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6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서비스 제공 공관 수를 20개로 확대하였다.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공관

**2009년(11개)** : 주중국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2010년(20개)** : 주중국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인내대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우즈베크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상투자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10여회 이상의 통상투자사절단을 파견중이다. 2011년에는 통상투자사절단의 파견 횟수를 더욱 확대하고, 파견지역도 기존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구매사절단 및 농식품 수출 시장개척단도 파견할 계획이다.<sup>1)</sup>

한편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협력대상 기관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대주재국 수출확대 및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sup>2)</sup> 또한 우리 기업들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2007년부터 '유엔 조달시장설명회'를 민관합동으로 7차례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해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08년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한 1조 6,000억불을 기록하였다. 2009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투자 위축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FDI 유치가 전년 대비 급감하였으나,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8%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1) 1999-2010.12월 현재 190여개국 파견

2) 2010년의 경우 전세계 39개 우리 재외공관에서 총 50회의 농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

2004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17.1억불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2004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로 2년 연속 110억불대를 기록하여,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다가, 2010년에는 130.7억불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신고액	12,796	11,566	11,247	10,515	11,711	11,484	13,070

\* 출처 : 지식경제부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Invest Korea 등을 중심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해외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에서는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주재국의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실적(건수)

연도	투자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투자유치단 및 투자방한단 지원	잠재투자가 발굴/기투자가 접촉	외국인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지원
2010	11	69	124	10

외교통상부는 FTA 및 양자 투자협정 체결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경제통상 정보 제공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입수한 각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sup>3)</su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근시장 정보란 및 해외입찰정보란을 각각 개설하여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들이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입찰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sup>4)</sup> 또한 외교통상부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상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0년도 사례집에는 2009년 한해동안 우리기업들이 주재국내 기업 경영활동 중에 겪은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와 통관, 투자, 노무 등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70개 공관의 지원 사례 182건이 소개되어 있다.

##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 1)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 현황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에서 여수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체계적인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08

3) 전경련, 대한상의, 해외건설협회, 부산시, 경상남도 등 45개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총 1,140건의 정보메일을 제공하였다.

4) 2010년판 외국의 통상환경은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분석, 정리한 총론적인 성격의 '분야별 통상환경'(1권)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아프리카·중동, 유럽 등 4개 지역의 국가(총 95개국)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한 각론적 성격의 '지역별 통상환경'(4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제1대 장승우 위원장에 이어 강동석 위원장이 2009년 6월 제2대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차장)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는 조직위 정관 등 중요 사안 의결을 위해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총회, 집행위원회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 사무처에 배영한 대외협력본부장 등 3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2)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교섭

2008년 5월 여수조직위가 여수박람회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여수조직위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제144차 BIE총회에서 여수박람회가 BIE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조직위는 BIE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여수조직위와 함께 2009년부터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참가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 세계 재외공관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수박람회 참가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2010년 12월까지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독일, 아랍 에미리트 등 총 75개국 및 OECD 등 4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하였다.

금년에도 재외공관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0개국 5개 국제기구 유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참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요



명칭 : 2012 여수세계박람회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기간 : 2012. 5.12~8.12(3개월간)  
장소 :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일대(174만㎡)  
박람회장 25만, 엑스포타운 54만, 엑스포역 16만,  
환승주차장 44만, 공원 및 기타 35만 등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참가지수 : 100개국가,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관람객수 : 약 800만명(국내 745만명, 외국 55만명)  
기대효과 : 생산유발 12.3조원, 부가가치 5.7조원,  
고용유발 7만9천명